

교육부,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촉구

이영차관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정치적 논쟁 중단하고 조속히 편성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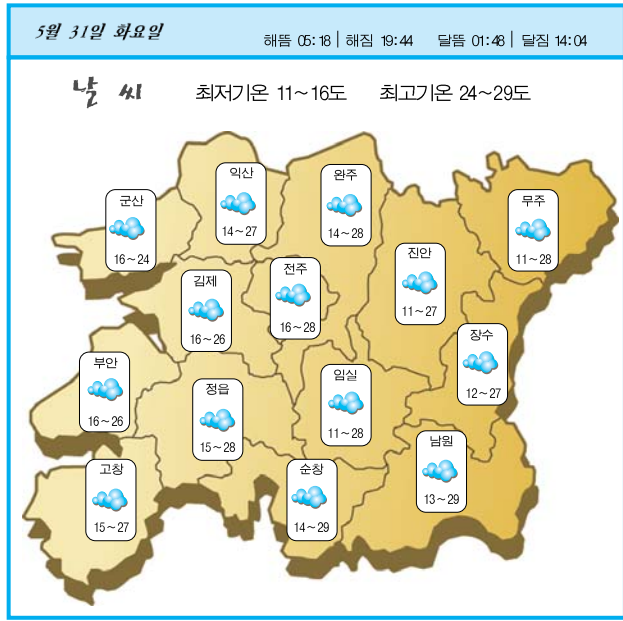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등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반발에 대해서는 "객관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청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배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상 위법 위반이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독립적인 7개 부분에 있어서 법률지문을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교육청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면서 "교육부도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었고 재원을 줬다는 부분에도 대해서도 두 달 넘게 감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됐든 지방채가 됐든 전입금이 됐든 모든 돈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온 돈에 대해서 책무성 있게 다 같이 점검하고 같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재

원이 부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차관은 "현재 판단으로는 (정부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교용지 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법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추락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전주시 일원의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인구밀집지역과 관내 주요노선 등 시민행사가 빈번한 거리, 가로간판, 세로간판, 불출간판, 옥상간판과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등이다.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양 구청 및 시 옥외광고물협회 12명 4개조로 구성된 이번 민·관 합동점검반은 간판과 건물의 접합상태 불량여부와 전기설비 노후 및 외부노출로 인한 감전사고, 간판의 노후 변형 이탈, 부식 등으로 인한 위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영재기자



미스전북 홍보대사 위촉식

30일 오후 2시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는 이형규정무부지사(가운데)와 임송희 미스전북 진(사진 오른쪽) 비롯한 수상자들과 위촉식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북대, 우즈벡·카자흐스탄에서 유학생 유치 홍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의 중앙아시아에서 유학생 유치 노력이 현지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지역선도육성사업단(단장 윤병숙)은 지난 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유학박람회에 참여해 전북대와 전주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유학박람회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한국의 29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학생 및 대학, 고교 관계자 1만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활발한 교류영향으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는 매년 3,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 단장은 "현재 전북대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20여명이며,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앞으로 유학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5월 31일(화) 및 6월 1일(수)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두 차례 유학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형기자

전주정보진흥원, '스마트 창작터' 운영사업 선정

전주시가 사물인터넷(IoT)과 ICT 융복합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창업 기반 확대에 나선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선, 이하 진흥원)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의 '스마트창작터'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진흥원은 사업선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사물인터넷 등 지역 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창의성과 창업의지가 뛰어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 및 창업 사업화 등 전문 창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사업은 다음 달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며, 진흥원은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육 후에는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통한 검증과 마케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등 성공창업을 위한 제품상용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창업 문제에 직면한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문선 진흥원장은 "스마트창작터 주관기관 선정으로 전주시 신성장산업 동력인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을 연계한 지역 내 성장산업 분야의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지역산업 고도화와 활기찬 일자리도시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9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 운영

주민센터 등 냉방기 갖춰진 관내 419개소 무더위쉼터 지정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대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폭염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폭염대책 기간 시는 시민안전담당관

과 노인복지부서, 보건소,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대책 기간 중 경로당과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냉방기가 갖춰진 관내 419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생

활관리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과 통장 등 2,0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 수시 안부 전화 및 건강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 석유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및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 예방 대처요령 등의 현장방문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본부를 가동,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해 문자서비스(SMS) 및 폭염주의 안내방송을 통해 폭염대처 행동요령 등을 전파하고, 관내 주요 도로의 온도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형일음을 비치하는 '쿨 서비스'도 추진된다. 김종엽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65세 이상 노인, 농민, 건설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